

李 대통령, 부처 ‘엇박자’ 논란에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

“조율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 행정
국무조정실→총리→대통령 순 조정
세제 개편안, 변경의 여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이 노출되거나,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속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시각차가 있는 등 부처별 ‘엇박자’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각 부처가 하는 일이 다르니 입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등 지적들이 가끔씩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검경 합수본, 대북 4자 대화, 주 52시간 예외, 교육교부금 개편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산업부와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예외 적용 이견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을 내고 관찰해 나가는 건, 사실 과거에 지적받던 ‘실질 행정’”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

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이걸 조정해 나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 이게 원래 가장 민주적”이라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인터뷰에서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

가”고 반문했다.

이어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면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걸 일부러 바깥에 대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간 당연히 논쟁이 있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으로 임명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해야,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룬다는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 당권주자 호남 집결... ‘당심’ 쟁탈전

오늘까지 전남광주·전북 온라인 투표
김민석, ‘전북 메가 플랜’ 제시
정청래, 현장서 시민 접촉 확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해 약 50만명의 권리당원의 당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전북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13~14일에는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동 응답(ARS) 투표를 실시한다. 호남 순회 경선은 15일 오전 1시 전남광주 나주, 오후 5시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린다.

대외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같아진 ‘1인1표제’를 실시하는 첫 선거인 만큼, 권리당원의 약 33%가 있는 호남 순회

경선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 경선을 마친 결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로 앞서가고 있다. 정 후보는 누적 득표율 44.53%로 김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송 후보는 9.47%로 고향인 호남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새벽부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찾아 출근길 인사 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국 메가 플랜’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 전북 익산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 김 후보는 전북 메가 플랜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2차·3차 대기업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 ▲현대차 투자 초고속 확대 성사 ▲다수 협력기업 유치 성사 ▲미

국과 중국 등의 AI(인공지능) 관련 새만금 투자를 성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전북금융중심을 강화 ▲국민적인 새만금 대협약을 통한 일부수의 공유모델 공론화로 새만금 개발기간을 초압축하는 그랜드 플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와 광양, 여수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고 호남 일정에 총력을 쏟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하락한 것을 두고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정청래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향해선 “4년 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 의원이 ‘지선 패배’는 이재명 책임이다, 사적 판단이



11일 전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 /뉴시스

앞섰다’고 했다”며 “남 탓이 습관성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이번 지선은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 안겠다”고 보탰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오전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과 조찬을 호남 민심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송 후보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광주전남어린이집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에서 제가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이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며 “말로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담은 국정과제가 123개라는 것도, 제1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격

삼전·하이닉스 경영진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별위원회가 11일 국가용인산단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국가용인산단을 방문해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면서 “산단 조성의 필수 선결 조건인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건의 사항도 꼼꼼하게 청취하고 촘촘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용인 산단의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탰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지회가 해야 하는 것은 남아 있는 부지 매입을 빨리 끝내고 가장 중요한 전력 문제에 있어서 송전망 연결이 민원 등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짓고 만약에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청와대,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

참모진 추가 개편 주목

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내 참모진의 추가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교체되던 시점에 홍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 달여가 지나 신임 수석 체제가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후임 춘추관장을 찾고 있었다. 청와대 대(對) 언론 업무를 총

괄하는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김 관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이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전날 밤 비공개 회의에서 김 관장을 징계 후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관장이 2014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변경해 세입자를 받고 있다며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 관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